

고문 敬官 4명 裁判회부

서울高法 金權泰씨 재정신청 받아들여

308.5
1988.12.15

재판부 곧 특별검사 지명

前치안본부장·검사등 11명은 각각

國監때의 偽證 처벌도 불가피

전 민정당원인 상금權泰씨를 고문한 혐의로 고발된 검찰관들의 대한 재정신청이 법원의 해 23개월만료로 받아들여져 고문정당 4명의 재판에 회부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趙悅來부장판사)는 15일 금

정 4명이 지난 85년 9월 금 씨를 치안본부장 임명할 때 공보위원으로 임명된 20여년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를 하면서 수차례의 일처리를 하던 시기인 1987년 11월 13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趙悅來부장판사)는 15일 금

정 4명(지안본부장 趙悅來, 서울지검장 趙悅來, 서울지검 1부장 趙悅來, 서울지검 2부장 趙悅來)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정 4명(지안본부장 趙悅來, 서울지검장 趙悅來, 서울지검 1부장 趙悅來, 서울지검 2부장 趙悅來)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정 4명(지안본부장 趙悅來, 서울지검장 趙悅來, 서울지검 1부장 趙悅來, 서울지검 2부장 趙悅來)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정 4명(지안본부장 趙悅來, 서울지검장 趙悅來, 서울지검 1부장 趙悅來, 서울지검 2부장 趙悅來)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정 4명(지안본부장 趙悅來, 서울지검장 趙悅來, 서울지검 1부장 趙悅來, 서울지검 2부장 趙悅來)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정 4명(지안본부장 趙悅來, 서울지검장 趙悅來, 서울지검 1부장 趙悅來, 서울지검 2부장 趙悅來)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정 4명(지안본부장 趙悅來, 서울지검장 趙悅來, 서울지검 1부장 趙悅來, 서울지검 2부장 趙悅來)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정 4명(지안본부장 趙悅來, 서울지검장 趙悅來, 서울지검 1부장 趙悅來, 서울지검 2부장 趙悅來)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정 4명(지안본부장 趙悅來, 서울지검장 趙悅來, 서울지검 1부장 趙悅來, 서울지검 2부장 趙悅來)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정 4명(지안본부장 趙悅來, 서울지검장 趙悅來, 서울지검 1부장 趙悅來, 서울지검 2부장 趙悅來)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금정 4명(지안본부장 趙悅來, 서울지검장 趙悅來, 서울지검 1부장 趙悅來, 서울지검 2부장 趙悅來)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고문경관 4명 재판회부

서울고법 김근태씨 재정신청 받아들여
전 내무장관등 11명은 기각...특별검사 곧 선임

304.5
1986.12.16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42)씨를 고문한 경찰관 4명이 법원의 재정신청 채택결정에 따라 법정에서 서게 됐다. <관련기사 9면>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는 15일 김씨의 부인 이재근씨와 강철선·홍성우·조영래 변호사 등 7명의 변호사가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백남은 경장(53·현 치안본부 대공2부 1계장)·김수현 경감(55·현 2부 2계장)·김영두 경위(50·현 대공수사단 조사반장)·최상남 경장(41·현 청량리 경찰서 경위) 등 4명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신청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을 서울형사지법에 회부하는 부심판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이 사건은 사건발생 39개월, 재정신청 접수 22개월만에 법원에 의해 고문사실이 인정된 셈이다.

앞으로 서울형사지법에 의해 공소유지 담당 지정변호사가 선임되는 대로 수사가 진행되며 부천서 성고문사건의 전례에 비추어 공판 전에 4명의 경관을 구속할 가능성도 크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을 통해 "피고인들은 85년 9월4일 오전 7시30분부터 25일 새벽 5시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김씨에게 자백을 강요하면서 가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팬티만 입힌 채 고문대에 누여 물고문과 전기고문 및 전기봉 고문을 가함으로써 형사피의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의 내무장관 정석모·치안본부장 박배근씨와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1과장 윤재호(59·현 치안본부 형사1과장)씨 등 7명의 독직폭행혐의에 대해서는 "고문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서울지검 공안부 김원치 검사의 직권남용혐의에 대해서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김씨로부터 진술을 받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여러차례 구치소에서 불러낸 것이지 고문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가족·변호인들과의 접견을 제한했다고는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안왕선·신광옥 검사와 서울 구치소 보안과장 송선홍씨의 직무유기 및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재정신청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각 기각했다.
한편 당사자인 김근태씨는 "아직 5공화국 세력이 청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리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법률상 2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있는 재정신청을 1년 10여개월 동안 법원이 미루어 온 점과 고문을 지시·은폐한 안기부장·치안본

부장 등과 고문을 당해 제대로 견지도 못하는 것을 직접 보고도 사실 은폐를 위해 면회와 접견을 봉쇄한 검찰을 배제한 점 등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고문경관들에게는 독직폭행혐의가 적용돼 징역 7년6월까지 처해질 수 있으나 특가법이 적용될 경우 22년6월까지의 실형이 가능하다.
고문경관등 3명 증인채택 김근태씨 손해배상 소송
서울민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황상현 부장판사)는 15일 전민청련 의장 김근태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10차례 판을 열고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백남은 경정과 김수현 경감 등 고문경관과 전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등 모두 3명을 증인으로 채택, 다음 기일인 1월16일 심문기로 했다.

법원, 고문피해 주장 인정 정권차원 조작·은폐 기도 밝혀져야

1986.12.16 308.5

해설 김근태씨 사건은 정치상황의 필요에 의해 반정부 세력을 좌경·용공으로 매도하기 위해 시나리오에 따라 자백을 강요해온 관행의 대표적 사례이다. 지난 85년 2·12총선 이후 제5공화국 정부는 학원안정법 제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그 뒤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탄압을 위해 민주위라는 대학생조직과 김씨를 함께 용공세력으로 묶어 김씨를 구속하면서 언론기관을 동원, 용공분자로 매도했다.
법원이 뒤늦게나마 고문경관 4명을 법정에 세우기로 결정했으나 이 사건은 당시의 수사기관인 검찰·경찰과 법원이 얼마나 정권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고있다. 경찰 등 수사기관의 전기고문·물고문 등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

은 검찰에서 그대로 인용됐고 법원은 피고인의 고문피해 주장을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 등이 고문경관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형식적인 수사를 통해 무혐의처리된 것이나 김씨가 고문의 증거로 보관해온 발뚱꿈치 딱지를 증거로 보관해 달라는 증거보전신청을 법원이 이유없이 받아들이지 않은것은 그 좋은 예이다.
앞으로 서울형사지법에 재판부가 지정되고 이 재판부가 공소유지를 담당할 지정변호사를 선임한 뒤 수사에 착수하게 된다.
법조계에서는 부천서 사건에서 법원에 의해 성고문사실은 인정됐으나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진상은은폐부분이 밝혀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이번에는 정권차원의 조직적인 사건조작도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김이택 기자>

金權泰씨 고문네 警官 재판회부

조선 1988. 12. 16

서울高法 裁定신청 받아들여... "11차례 고문" 인정



◇지난 11월 재판부의 증거조사에서 진술하기 위해 부인 印在謹씨와 함께 법원에 나온 金權泰씨.

고문당한 사실을 밝혀줄것을 요구한 전 민정련의장 金權泰씨(48) 사건재정신청이 법원의 의해 받아들여져 고문을 한 경찰관 4명이 사건 발생 3년 3개월만에 재판을 받게 됐다. <판례기사 14면> 서울고법 3부(재판장 趙悅來부장판사)는 15일 85년 사건 당시 金씨를 조사했던 친인척부 대우수사단 경 찰관들인 金秀顯(金秀光)과 경 찰관 崔南南(崔南南) 등 4명이 고문을 한 사실을

인정, 특직·특별형의로서 형사처벌의 재판을 회부토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金씨변호인단이 함께 고발한 朴培根(朴培根) 내무부장관, 尹在鶴(尹在鶴) 공주사단 1과장, 尹在鶴(尹在鶴) 대우수사단 1과장, 尹在鶴(尹在鶴) 대우수사단 1과장 등 4명도 고문했는지 여부를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지난 2월 부처서 상고사건의 文貴重(文貴重) 전정장의 이 사건이 유죄판결을 내린 이후이다. <판례기사 14면> 이번 결정에 따라 이 사건을 배정받은 서울지법 4부(재판장 尹在鶴)는 4명의 공소유지를 발할 예정인 金秀顯(金秀光)을 제외하고 4명도 고문했는지 여부를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고문경찰관 4명의 대한 재판은 내년 2월 8일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1부(재판장 金秀顯)는 유죄판결사건에 대한 고문한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유죄 내무위가 위증혐의로 고발한 것이 확실시 돼 위증죄의 처벌도 불기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문의 서 9월 4일 오전 7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서울 용산구 관동동 치안본부 대공분실 515호실에서 金씨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 등으로 조사하며, 金씨가 불법행위에 합의하고 진술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모을 벗겨 고문한 것을 비롯, 같은달 25일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불고문 전 고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피고인인 11명 중 鄭石模(鄭石模) 내무부장관에게 경찰부 구치소 관계자 8명의 대한선 『이들 고문에 가담했거나 고문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대한선 불기피 소결정(鄭石模)을 내렸다. 또 당시 金씨고문사건의 진화수사를 맡았던 金源治(金源治) 대우수사단 3명이 인사규칙에 관한 진술을 유기했다. 金씨측 주장에 대해서는 『진부유기』로 재정신청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유불기각했다.』

김근태씨 재정신청 결정문 <요지>

피고인들은 지난 85년 9월4일 오전 6시에 전민청련 의장 김근태를 서울 용산구 갈월동 98 소재 대공수사단 대공분실 515호 실로 연행, 집시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실을 조사하던 중, 9월4일 오전 7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불법 연행에 항의, 진술을 거부하는 김근태를 높이 1m 길이 1m70cm 정도의 고문대 위에 팬티만 입은 알몸으로 눕혀 담요로 몸을 감싸고 발목 무릎 허벅지 배 가슴 등 다섯

부위를 묶은 뒤 두터운 수건을 얼굴에 썩워 입과 코에 물을 붓는 등 물고문을 가해 호흡곤란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하고 이어 9월4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같은 물고문을 가했다. 피고인들은 9월5일 오후 8시30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30분까지 서울대 지하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와의 관련 여부 및 이른바 민중민주주의혁명론 이념 관계 등을 추궁하면서 김근태를

팬티까지 벗긴 알몸으로 고문대 위에 눕혀 가슴 사타구니 발 등 세 부위에 물을 뿌려 젖게 한 다음 김영두·최상남이 물고문을 한 뒤 성명이 밝혀지지 않은 전기고문 기술자가 김근태의 발가락 부위에 전기도선을 연결,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전류를 흘려보내다가 점점 길고 강하게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기고문을 가했으며, 9월6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9월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과거 행적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면서 각각 물고문·전기고문을 가했다.

피고인들은 9월10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김근태를 고문대 위에 눕혀 이제까지 한 진술을 재확인시키는 방법으로 종전의 진술내용을 다시 반복토록 요구하면서, 발등에 기구를 부착시킨 뒤 김수현이 기구에 전기봉을 접촉, 작동시킴으로써 강한 진동으로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전기고문을 가했다.

또한 9월13일 오후 10시부터 14일 오전 5시까지, 9월20일 오후 8시부터 10시30분까지 이미 진술한 내용을 확인시키기 위해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도록 강요하면서 여러차례 물고문·전기고문을 가했다.

1988.12.16

「拷問」에 철퇴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의 재정신청의 결정문 요지 발췌
 9월4일 오전 7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불법 연행에 항의, 진술을 거부하는 김근태를 높이 1m 길이 1m70cm 정도의 고문대 위에 팬티만 입은 알몸으로 눕혀 담요로 몸을 감싸고 발목 무릎 허벅지 배 가슴 등 다섯 부위를 묶은 뒤 두터운 수건을 얼굴에 썩워 입과 코에 물을 붓는 등 물고문을 가해 호흡곤란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하고 이어 9월4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같은 물고문을 가했다.

피고인들은 9월5일 오후 8시30분부터 이튿날 새벽 1시30분까지 서울대 지하조직인 민주화추진위원회와의 관련 여부 및 이른바 민중민주주의혁명론 이념 관계 등을 추궁하면서 김근태를 팬티까지 벗긴 알몸으로 고문대 위에 눕혀 가슴 사타구니 발 등 세 부위에 물을 뿌려 젖게 한 다음 김영두·최상남이 물고문을 한 뒤 성명이 밝혀지지 않은 전기고문 기술자가 김근태의 발가락 부위에 전기도선을 연결,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전류를 흘려보내다가 점점 길고 강하게 전류를 흘려보내는 전기고문을 가했으며, 9월6일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9월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같은 날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과거 행적에 대한 진술을 요구하면서 각각 물고문·전기고문을 가했다.

또한 9월13일 오후 10시부터 14일 오전 5시까지, 9월20일 오후 8시부터 10시30분까지 이미 진술한 내용을 확인시키기 위해 같은 내용의 진술을 반복하도록 강요하면서 여러차례 물고문·전기고문을 가했다.

피고인들은 9월10일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김근태를 고문대 위에 눕혀 이제까지 한 진술을 재확인시키는 방법으로 종전의 진술내용을 다시 반복토록 요구하면서, 발등에 기구를 부착시킨 뒤 김수현이 기구에 전기봉을 접촉, 작동시킴으로써 강한 진동으로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전기고문을 가했다.

조심

1988.12.16
 「拷問」에 철퇴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의 재정신청의 결정문 요지 발췌...
 9월4일 오전 7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불법 연행에 항의, 진술을 거부하는 김근태를 높이 1m 길이 1m70cm 정도의 고문대 위에 팬티만 입은 알몸으로 눕혀 담요로 몸을 감싸고 발목 무릎 허벅지 배 가슴 등 다섯 부위를 묶은 뒤 두터운 수건을 얼굴에 썩워 입과 코에 물을 붓는 등 물고문을 가해 호흡곤란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하고 이어 9월4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같은 물고문을 가했다.

「拷問」에 철퇴를

전민청련의장 김근태씨의 재정신청의 결정문 요지 발췌...
 9월4일 오전 7시30분부터 12시30분까지 불법 연행에 항의, 진술을 거부하는 김근태를 높이 1m 길이 1m70cm 정도의 고문대 위에 팬티만 입은 알몸으로 눕혀 담요로 몸을 감싸고 발목 무릎 허벅지 배 가슴 등 다섯 부위를 묶은 뒤 두터운 수건을 얼굴에 썩워 입과 코에 물을 붓는 등 물고문을 가해 호흡곤란으로 인한 고통을 받게 하고 이어 9월4일 오후 8시부터 이튿날 새벽 1시까지 같은 물고문을 가했다.

拷問警官의 裁判 회부 1988. 12. 16

법원은 前민청련의장 金槿泰씨에 대한 고문사실을 인정, 白南殷정등 4명의 고문경찰관을 재판에 회부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이 고문경찰관을 재판에 붙이도록 결정한 것은 高川鐸의 性고문 사건이후 두번째가 된다.

이로써 5공화국에서 저질러진 숱한 인권유린사건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으로 국내에서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사건의 진상이 꺾질을 벗을 것으로 기대된다. 잘 알려진 것처럼 金槿泰씨는 85년 8월 경찰에 연행된 뒤, 86년 3월 6일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위반으로 제 1심에서 7년형을 선고받았었다.

1심의 판결문은 金씨가 「부인하고, 또한 민청련의 규약에도 나와있지 않은」 소위 「민족민주주의」가 옹공성을 지닌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국외공산계열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었다. 그뒤 그는 2심에서 5년형을 선고받고, 3심에서도 「고문을했다는 피고의 주장은 근거가없다」는 이유로 2심판결이 확정돼 복역중 지난 6월30일 가석방됐었다.

따라서 서울고법이 이번에 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金槿泰씨고문사실을 인정한것은 재판부와 검찰을 포함한 이나라의 사법제도 전체에 뼈아픈 경고와 자기반성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볼수있다. 공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불법적인 폭력과 고문이 공식적으로 노출되기는 朴鍾哲군 치사사건과 性고문사건에 이어 이번으로 세번째가 된다.

변호인단과 金씨의 부인이 재정신청을 낸지 22개월만에야 재판부가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그동안 이 나라의 사법제도가 구조적으로 병들어있었음을

한마디로 말해주고있다. 「고문을 담당한 피의자는 그에 압도돼 날조된 사실이 마치 실제 존재했던것처럼 느껴지고, 이때문에 검찰에서도 부인할 수없게된다」고 金槿泰씨는 가석방되던날 말했다. 물고문과 전기고문 그리고 구타등의 폭력으로 옹공분자를 만들고, 그것이 검찰과 재판부까지 아무런 제약없이 한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난인적어버린 끔찍스런 사태는 이제 근본적으로 끝나야할 것이다.

金槿泰씨사건도 역시 高川鐸성고문사건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받아들이지를 거부해서 재판부에 대한 재정신청으로 넘어간 것이었다. 더구나 지난10월까지 만해도 국정감사에서 치안본부관계자들은 「고문한 일이없다」고잡아편사건이다.

사건의 내막은 따라서 앞으로 임명될 특별검사에 의해 철저히 밝혀지기를 기대한다. 동시에 비록 법원의 재정결정에서는 「법적책임」이 면책됐지만 바로 엇그제까지 고문사실을 부인했던 관계자들도 어떤 형태로든 그만한 반성과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검찰쪽에서도 입장은 마찬가지다.

이런 뼈아픈 자기반성과 비판이 있고 서야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범죄적행태가 청산될 것이다. 우리가 한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일이 아니라 이나라의 민주화를 위한 디딤돌로서 이사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이유가 그것이다.

한걸음 나아가 우리는 그동안 정권유지의 편법으로 악용돼온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악법과 각종 형사관계 인권조항의 개폐작업을 여야 모두 서둘러야될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 인권의 보장이야말로 국가발전의 초석임을 굳게 믿기 때문이다.

刀 从 : 番號

日字: 1988 12 16

所載: 中 央

15

前民青聯의장 金槿泰씨(42)의 고문결정인 재판에 회부된 4명의 전기고문관 고

“金槿泰씨 전기고문 담당한 성명미상 警官 밝혀라”

法曹界、檢察 적극수사를 촉구

中 央

담결판 1명이 더 있다는 사실이 법원에 의해 확인됐는데도 「성명불상자로 처리된 자 점·결함이 적지 않으므로 수사해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金씨의 재정신청사건 담당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3부(재판장 趙悅來부장판사)는 15일 결정문중 재판에 회부한 4명의 검찰관 범죄사실을 통해 「성명 불상자와 공명론」 6차례 金씨를 전기고문했다고 밝히고 있다. 결정문의 「파면」 「정명상자」 「다들 검찰관이 다 소 약하게 불고문을 하류 발가락부위에 전기도선을 연결하여 처음에는 짧고 약하게 전류를 흘려 보내다가 점점 길고 강하게 전류를 흘려보내느 소위 전기고문을 한 것으로 나타나 전기고문 전문기술자로 보여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법주에서는 재판부의 회부된 고문결정인 4명의 공소유지 지정변호사(특별검사)는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권력이 적지 않으므로 수사권을 발동하거나 권력이 자제수사를 통해 이

司法府 신뢰회복의 큰 轉機

「金權泰씨 고문」 裁定결정 의미

법원의 金權泰씨 고문사건의 재심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전스재판 열리게 돼

술자를 수사한 경찰관들의 고문행위 영부금 영의미 재판 과정에서 발동되었지만 법원이 재심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사건 발생 3년만에 구체적 조사 拷問 「사법적 처벌」 분명하게 천명

「경찰법전」 해당... 特加法 적용 22년

지정되었던. 현 재판부 판결심리. 술자가 모진고문을 당했다. 고문행위 3년만에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술자가 모진고문을 당했다. 고문행위 3년만에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재판부는 전스재판의 영의미 비로소 판결심리 3개월 만의 재심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법원은 사법적 처벌이 분명하게 천명되었다. 술자가 모진고문을 당했다. 고문행위 3년만에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술자가 모진고문을 당했다. 고문행위 3년만에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경찰관 4명 법전사실 영의

재판부가 재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술자 고문행위 4명의 법원 전스재판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술자가 모진고문을 당했다. 고문행위 3년만에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술자가 모진고문을 당했다. 고문행위 3년만에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법원은 사법적 처벌이 분명하게 천명되었다. 술자가 모진고문을 당했다. 고문행위 3년만에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술자가 모진고문을 당했다. 고문행위 3년만에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검찰 수사 형식에 그쳐

법원 재심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심리를 85도 진행

술자를 수사한 경찰관들의 고문행위 영부금 영의미 재판 과정에서 발동되었지만 법원이 재심판결을 받아들임으로써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법원은 사법적 처벌이 분명하게 천명되었다. 술자가 모진고문을 당했다. 고문행위 3년만에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술자가 모진고문을 당했다. 고문행위 3년만에 구체적 조사가 이루어졌다.

경찰관 4명 법전사실 영의

재판부가 재심판결을 확정하면서 술자 고문행위 4명의 법원 전스재판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이 사건은 재심재판 절차를 거쳐졌다.

김근태씨 죽친 '이름 모를 전기고문 기술자' 경기도경 공안실장 이근안씨

김씨 6개월추적... 이재오씨등 3명도 확인

이근안씨 "김씨 사건에 관여 안했다"

김근태(42)씨를 고문한 '성명 불상'의 '전기고문 기술자'는 경기도경 공안실장 이근안(50) 경감이라는 사실이 이씨로부터 고문을 받은 김씨는 물론 이재오(43·서울민중연합 의장), 이선근(35·전노련사건 관련), 박문식(30·)씨 등에 의해 확인됐다.

김씨는 지난 6월30일 특별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85년 9월 남영동 소재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6차례에 걸쳐 자신을 전기고문한 '이름 모를 전기고문 기술자'를 추적한 끝에 6개월여 만인 20일 사진을 통해 그가 바로 이 경감임을 밝혀냈다. 김씨는 이 사실을 이재오씨 등 3명에게 확인한 결과 한결같이 '대공분실에서 조사받을 당시 이 경감으로부터 전기고문은 물론 물고문, 구타 등 갖가지 고문을 당했다는' 대답을 들었다.

김씨는 "나에 대한 전기고문은 85년 9월5일에 한번, 6일에 한번, 8일에 2번, 13일에 한번, 20일에 1번 등 모두 6차례 가해졌는데 그때마다 '반달곰'이란 별명을 가진 무지막지하게 생긴 사내가 담당했다"며 "다만 이씨의 얼굴



이근안 경기도경 공안실장. 1988.12.21

을 직접 확인할 길이 없어 고소장에도 '이름 모를 전기고문 기술자'로 했는데 20일 이씨의 사진을 보고 그가 틀림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가 받아들인 김근태씨 고문에 대한 재정신청 결정문에 따르면 백남은·김수현·김영두·최상남씨 등 치안본부 대공수사단 소속 경찰관 4명은 '성

명 불상자와 공동으로' 6차례에 걸쳐 전기고문을 자행한 것으로 돼 있다.

김씨는 "전기고문을 전담한 자가 엄연히 따로 있어 검찰이 밝혀줄 것을 요구했으나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검찰이 수사한 사항에 따라 결정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변호인단과의 상의를 거쳐 이 경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외에도 81년 전노련사건의 이선근씨와 박문식씨, 73년 반공법 위반 및 내란음모사건의 이재오씨도 이씨의 사진을 보고 "이 경감에게 전기고문은 물론 구타, 물고문 등 갖은 고문을 다 당했다"며 김근태씨의 말에 동의

했다. 박문식씨는 "남영동에서 20여일간 고문을 당하는 동안 그는 항상 핏발선 눈빛이었고 90kg이 넘어 보이는 거구로 칠성판 위에 묶고는 깔고 앉아 목을 조르고 물고문, 전기고문, 발바닥 구타 등을 섞었"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근안 경감은 "85년 3월30일자로 치안본부에서 경기도경으로 발령이 났기 때문에 김근태씨 사건 수사에 참여한 적이 없다"면서 "79년 남민전사건과 81년 전노련사건 당시엔 연행돼 온 사건 관련자들을 감시하고 옆에서 심부름은 했으나 신문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근태씨 말고도 고문 모두 수사하라

지난 15일 서울고법은 김근태씨의 고문에 대한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고문 경찰관 4명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실로 이 결정은 고문이 있는 날로부터 3년 3개월, 재정신청을 한 날로부터 1년 10개월만의 일이다. 너무나 명백한 진실을 인정받는 데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렸다. 이 결정을 보면서 응징해야 할 과거의 죄악과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재정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이 있기까지 그 고문사실을 은폐해 온 치안본부 간부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은폐와 조작에 적극 동조한 검찰과 사법부의 행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김근태씨가 당한 고문의 진상을 알고도 수사를 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접견금지까지 시켜 은폐에 앞장선 김원치 검사, 그 '피문은 기록'을 그대로 원용하여 7년의 형을 선고한 서성판사, 고문의 증거보전 청구를 괴이한 논리로 기각한 김오수 판사, 그들의 죄과는 아직도 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더구나 김근태씨가 당한 고문을 법원이 확인

한 이번의 결정은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거쳐간 수많은 시국사범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한 것이 모두 진실이었음을 입증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고문의 피해를 전면적으로 수사하여 고문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들을 가려 엄벌해야 한다. 김근태씨를 고문한 4명의 경찰관을 재판에 넘기는 결정만으로는 우리 사회를 '고문이 없는 나라'로 만들 수 없다. 고문을 지휘하고 비호하던 자들이 아직도 요직을 차지하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고문이 근절될 수 있겠는가?

잔학한 고문으로 조작한 서노련사건, 민주위 사건, 반제동맹당사건, 보임기확사건 등 5공화국시대에 저질러진 용공조작의 온갖 죄악들은 아직 흑막에 가려져 있다. 이 끔찍한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해 지금부터라도 진상을 밝히고 고문자와 그 방조자들을 처벌하는 한편 피해자들에게 대한 보상으로 더럽혀진 민족사를 정화하는 작업을 당장 시작해야 한다. 이 과업이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검찰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지 않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특별검찰부 또는 특별검사제도는 여기에도 필요하다.

李根安경감 공동음슴發키로

南民戰事건등 피해자 拷問책임자도 처벌 요구

保安司 安企部 고문행위자도 추적 고발추진

속보 115공화국시절의 고문피해자들이 치안본부 대공부서에 의한 고문의 실태를 폭로하면서 5공시절 각수사기관에 의한 고문행위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5공시절 공안부의 의한 잔혹한 고문행위가 새 문명정점으로 확산되고 있다. 고문피해자들은 고문가 해자를 고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이에 안전 검찰과

결함의 처리가 주목된다. 고문피해자들 우선 1차로 시국관련사건 구속자들 사이에 「고문기술자」로 악명이 높았던 李根安(39)을 고발한 뒤 계속해서 검찰 보안사 안기 부서의 고문행위자를 추적, 고발하고 책임자의 처벌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석방된 남민전 사건관련 李鍾日(36) 반제동맹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李

경감을 집단고발키로 했다. 고발했다. 李鍾日 자신들의 출역후 신변이 정면되는 내부담합 피해당사자들이 모여 집단고발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81년 전노련 사건으로 구속수감됐다. 지난 10월 30일 가석방된 李泰顯씨(39)는 지난 81년 南營洞치안본부 대공부실에서 金權泰씨 등이 전기 고문기술자로 지목한 경기도 경 대공문심장 李根安(39)을

은로부터 전기고문 허민주 등을 출동한 고문을 당했으며 「출진전후 李鍾日」을 고문한 가혹행위 등 혐의를 고발하려고 한다. 공소시효를

의 문제가 얽혀 있어 몇몇 며이년에 출진한 고문피해 자들과 함께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남민전사건관련으로

지난 79년 10월 4일 치안본부에 고발했던 李鍾日씨는 40여일간 조사를 받으며, 李鍾日씨를 비롯 박달나루로 다리와 수파등을 두들겨 망이뚜 부풀이 등을 무릎 꿇게 하는 등

리구 도문행위했다고 밝혔다.

김근태씨 고문사건 재판부 배당

서울형사지법은 23일 김근태씨를 고문한 경관 백남은(53·현 치안본부 대공2부1계장)씨등 4명의 독직폭행사건을 합의12부(재판장 김종식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로써 재판부가 지정변호사를 선임하는 대로 이사건에 대한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가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열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김씨와 부인 인재씨와 7명의 변호인단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뒤 지난 22일 부심판 결정문 등 기록을 서울 형사지법에 송치한 바 있다. 1988.2.24



김근태씨

"나를 고문한 사람들을 고발하고 재정신청을 내고 하는 일들이 단지 한을 풀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고문한 자가 처벌을

받기는커녕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게다가 승진까지 하는 현실은 우리 사회가 언제든 누구에게나 고문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구조 속에 머물러 있음을 반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구조를 바꿔보기 위해 고문자들을 추적해 왔다."

김근태씨는 지난 6월30일 특

공안분실장으로 있는 이근안 경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가 지난 20일 사진을 보고 '틀림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씨는 '고문전문가로 악명이 자자한 이 경감에 대해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재정신청을 낸 고

고문자 처벌커녕 승진되는 현실 개탄 군부독재 역습·반격 철저히 대비할터

88.12.24

별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줄곧 '이름은 모르지만 생김새는 또렷이 기억하고 있는 전기고문 기술자'를 탐문한 끝에 과거 남민전·전노련·반제동맹사건으로 끌려갔던 사람들도 바로 '그'에게 온갖 고문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그'가 현재 경기도청

문관전자 15명중 11명이 기각된 사실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 중 윤재호 총경은 고문을 직접 지시했고 김원치 검사는 고문의 증거인멸을 위해 가족 및 변호인과의 접견을 20차례에 걸쳐 철저히 봉쇄한 인물이므로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또 "고문 현장에는 없었지만 박종철 사건에서 보듯이 고문을 배후에서 교사했음에 틀림없는 당시 정석모 내무부장관, 박배근 치안본부장, 박치원 치안본부 5차장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관 4명에 대해서나마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을 일단은 '변화의 조짐'으로 본다는 김씨는 요즘 재야운동권의 총합체가 될 전국민족민주운동협의회 결성 준비에 바쁜 가운데 각종 강연회·시위·농성 등에 참여하고 있다.

'체제수호' '보수대연합' 등 요즘의 심상치 않은 기류에 매우 주목한다는 그는 이를 '민주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전포고'로 보고 "활동가로서 대중과 더불어 군부독재의 역습·반격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말을 맺었다.

<문학진 기자>

'고문 기술자' 수사 외면

검찰·경찰 서로 미뤄...증거조작 우려 이근안경감 보도뒤 자취감춰

피해자, 내주말 집단고소키로

'고문기술자' 이근안(50·경기도 경 공안분실장)경감으로부터 고문을 받았다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으나 경찰은 물론 검찰도 이를 외면, 자진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어 고문을 척결하겠다는 당국의 수사체 태도 표명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고문을 해오거나 방조해온 입장에서 조금도 변화가 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부친서 성고문사건에서도 경찰서 간부들이 알리바이를 조작했으며 박종철씨 고문치사사건에서도 관련 경관을 축소 조작한 경험에 비추어 수사착수가 늦어질 경우 증거조작의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많다.

경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고문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나 막상 고문경찰이 밝혀져도 수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

치안본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경찰이 자체조사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어떤 경찰관이 자기 고문을 했다고 얘기하겠느냐"며 "수사를 해야 한다면 검찰에서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뤄볼 때 경찰 자체조사 결과를 국민들이 믿어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치안본부 관계자들은 이근안경감의 고문 사실이 지난 21일자

〈한겨레신문〉에 처음 보도됐을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검찰도 공익의 대표자로서 고문을 추방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고 이제까지 고문을 목인 내지 방조해온 입장을 그대로 지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근태씨 사건이 재정신청증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의 고소·고발이 없이는 수사권을 발동하기 어려워 지금 단계에서는 검찰이 나설 입장이 아닌 것 같다"며 인지사건으로 수사할 의향이 없음을 밝히고 "앞으로 전일될 지정변호사(특별검사)가 맡아서 할 사항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난 15일 김씨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 형사3부 조열래 부장판사는 "이 사안이 지정변호사가 수사할 대상은 아닌 것 같다"며 "헌법법상 부심판 결정문에 나와 있는 피고인의 혐의사실에 대한 공소유지만 맡게 되는 것이므로 새로운 피고인을 기소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야법조계에서는 변호인단이 애초에 고문경찰관 8명을 고발할 때 이름을 알 수 없어 고문기술자의 이름을 쓰지 못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던 것이므로 그에 대해 검찰은 마땅히 수사를 해야 했음에도 전혀 하지 않았고 여러 피해자들에 의해 고

문사실이 밝혀진 현재 검찰은 당연히 그 사실여부에 대해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재정신청증이어서 검찰이 나설 수 없다는 것은 전혀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철선 변호사는 "지정변호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재정신청 결정문에 나와있는 대로 그 공소유지에만 주력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실을 추가조사·기소할 수가 없게 돼 있다"면서 "따라서 지정변호사는 이근안 경감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또 "고소·고발이 들어와야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검찰의 태도는 해묵은 타성이며 핑계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다. 경찰과 검찰이 수사를 얹자 김근태씨는 다음 주말께 반계동맹당사건 관련자 등 다른 고문피해자들과 함께 이 경감을 독직 폭행 등 혐의로 집단 고소할 예정이다.

한편 이근안 경감은 〈한겨레신문〉의 첫 보도이후 자취를 감추며 경찰에서는 출장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설

'고문기술자' 이근안씨를 수사하라

1988.12.24

7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양심선언'이라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었다. 수사기관의 강압적인 분위기와 수많은 고문사례를 들어 알고 있던 만큼, 수사기관에 연행되어 고문을 받다가 불가항력으로 양심과 진실에 어긋나는 진술을 하게 되더라도 본의가 아님을 미리 밝혀둠으로써 스스로의 양심을 지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문명사회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사기관의 고문과 폭력이 한국에서는 다반사가 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80년의 광주학살 이후에는 폭력과 고문의 공포가 사회를 지배하게 되었다. 폭력은 '거짓' 속에서 은신처를 찾았고 거짓은 폭력에 호소했다. 그 폭력의 전형이 광주학살과 고문이었다고 거짓의 전달을 담당하는 주역이 언론이었음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고문이 근절되기만 하더라도 민주화가 이루어지리라는 말까지 나온 것을 보아도 고문이 얼마나 큰 민주주의의 적이었던가를 알 수 있다.

이 고문의 폭력과 거짓에 맞서 끝까지 양심의 자유를 지킨 사람이 박종철씨였고, 목숨을 걸고 폭력과 대결한 뒤에 고문을 뿌리뽑기 위해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이 김근태씨와 권인숙씨이다. 양심을 지키려다 죽는 것은 진실과 진리를 위한 생명활동의 극치이며 목숨을 버려

진실을 수호했다는 점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증언이다.

김근태씨에게, 그리고 주요 시국·공안 사건 관련자들에게 가혹한 고문을 가한 '이름모를 전 고문기술자'가 지금 경기도경 공안분실장인 이근안씨라는 사실이 드러나 고문이 다시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다(〈한겨레신문〉 21일자). "관절을 뽑았다 넣었다 한다"는 그가 얼마나 많이 혹독한 고문을 했으면 인간의 이름 앞에 '고문 기술자'라는 별명이 붙었을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아직도 경찰의 고위직에 머물러 있는가? 더구나 놀라운 일은 이런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피해자들의 고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검찰은 이제까지 피해자들의 고발이 있어야만 수사에 착수했는가? 사소한 범죄에는 기민하게 수사권을 발동했던 검찰이 이런 엄청난 범죄에 대해서는 조사조차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고문기술자'라는 말까지 듣는 사람을 그대로 보고만 있는 것은 내일의 고문을 공공연히 조장하는 것이 분명하다. 고문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안다면, 그리고 국민의 최대 관심사의 하나가 고문의 근절임을 안다면 검찰은 즉시 이근안씨를 조사해서 구속한 뒤 사법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拷問기술자 웬 말인가 한국 308 1988.12.25

20세기 문명국가이자 민주국가에서 고문이 아직도 유행한다는 것은 인권보호 차원은 물론 나라의 체면으로 봐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사전 조작과 억지 자백 강요를 위해 참을 수 없는 육체적 고문을 가하는 고문행위야말로 인간 사회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반도덕적 반인권적 최악의 일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제 국민의 놀라움과 분노 속에 5공화국시대의 인권탄압행위가 하나 하나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전민청련의장 김희태 등이 자신들에게 무자비한 가혹행위를 한 국내 최고 전기고문기술자라고 주장, 고소했던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50)에게 대해 5공비리차원에서 수사에 나섰다. 우리는 지금까지 술한 피해자들의 고문자색출·처벌요구를 외면해오던 사직당국의 수사 착수가 晩時之歎의 느낌은 있으나 이번 사건의 철저한 수사는 물론 이를 계기로 지난날 수사당국의 비인간적인 가혹행위의 진상이 낱알이 밝혀지게 되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도대체 민주국가에 있어 어느 법에도 고문을 용인하는 조항은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憲法 이래 8차의 改憲에도 고문 금지 조항은 면면히 유지되어 오고 있다. 현행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했고 7항에선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은 유죄로 인정하거나 처벌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도 세계인권선언문에 유엔은 1975년 12월 9일 총회에서 全文 12개항의 고문금지선언을 만

장일치로 채택, 각국에 이의 실천을 권고해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고문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버젓이 고문이 성행해 온 게 사실이다. 이 땅의 고문은 특히 유신-5공 등 반민주적인 억압시대에 정권유지를 위해, 반대세력을 탄압하기 위해 더욱 기승을 부렸던 것을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다. 결국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 잠안재우기 등 온갖 가학행위로 술한 사람들이 육체적 고통을 받고 허위자백으로 복역했으며 끝내 짚은 朴鍾哲, 明憲烈 군 등을 숨지게 하고 性고문까지 자행하기도 한 것이다.

고문이 인간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가는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지난 11월 한양대 건강정신연구소가 주최한 「고문 피해자 세미나」에서 학자들은 「고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을 무참히 파괴하고 엄청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을 남긴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金二泳 교수(한양대)는 「고문은 外傷이 치유된 후에도 각종 통증을 유발함은 물론 자긍심과 인간의 신뢰감을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심각한 악성이다」고 경고했다.

이제 고문은 이 땅에서 영원히 추방되어야 한다. 고문을 없애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감시노력과 공권력을 행사하는 수사관들의 자세 확립도 중요하지만 원천적으로는 권위주의를 청산, 참다운 민주화만이 지름길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검찰은 이번 이근안(50)의 고문행위 여부에 대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땅에 두 번 다시 고문이 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근안경감 수사 착수

308.5 1988.12.25
검찰, 김근태씨 등 불러 고문사실 확인키로

김기춘 검찰총장은 24일 김근태씨를 고문한 '성명불상의 고문기술자'로 밝혀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50) 경감에 대한 수사를 5공비리 척결차원에서 검찰 5공비리 특별수사부가 직접 조사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특별수사부 제5반(대검 중앙수사부 4과)에 배당하는 한편 특별수

사부 종합검토반의 박영수 검사를 이 수사에 추가 투입했다.

김 총장은 "서울지검이 지난 86년 이 사건 관련 경관들을 무혐의 처리했던 수사기록을 재검토하여 이근안 경감과 김근태씨 등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되면 '입단할 방침'이라며 "이 경감과 관련된 모든 점을 내사한 뒤 앞으로 적극적 능동적으

로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문기술자' 이근안은 누구인가

'고문기술자' 이근안(50) 경감은 지난 70년 순경으로 경찰에 들어가 18년간 경찰관 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대공·공안 분야에만 몸담아 왔다. 이 경감은 이 기간 동안 매년 특진으로 승진했고 79년 경위로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 근무할 때는 청룡봉사상을 받기도 했다.

이 경감은 지금까지 16회의 표창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간첩검거유공'이 4회 포함돼 있고 81년에는 서울대생들의 무림사건 해결에 공을 세워 내부부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82년에 '국가안보기여'로 9사단장 표창, 86년 경찰의 날에는 대통령으로부터 육조근정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 경감이 '성명불상의 고문기술자'라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나가자 "나도 그에게 당했다"는 전화가 한겨레신문사에 빗발칠

헌병출신 90kg 거구...공안사건 해결사 악명 남북어부 간첩조작 혐의 재정신청 당하기도

만큼 그 분야에서는 유명한 존재였고 대공 공안분야에서 "이근안이 없으면 수사가 안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문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있었다. 그는 연행자 앞에서 한손으로 사과를 으개 보이면서 "철성판은 나의 발명품" "내가 손대면 입을 열게 돼 있다"는 등 위협적인 말을 예사로

하기도 했다. 1985년 10월 90kg이 넘어 보이는 거구로 조사실을 돌아다니면서 손가락 두 개로 팔을 슬쩍 잡아 누르면 기겁을 할 만큼 아팠다는 것이 경협자들의 공통된 얘기다.

구리빛 얼굴, 핏발선 눈, 굵은 목, 딱 벌어진 어깨, 슬뚜껑처럼

경기도경 공안분실장으로 있으면서 작년부터는 삼성그룹 등 기업체의 직원연수회에 강사로 초빙돼 운동권의 실태와 자신의 수사경험 등을 강연했고 삼성전자 등의 노조설립을 방해하는 데 앞장서 노동자들을 납치, 폭행하기도 했다는 것이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이 경감은 고문으로 간첩죄를 뒤집어 쓰고 구속됐다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남북어부 김성학(38·경기도 광주군 동부읍 신장2리 427-66)씨로부터 지난해 12월 10일 재정신청이 제기돼 현재 서울고법에서 심리중이기도 하다.

대전 8중, 서울 7고를 졸업한 이 경감은 공군헌병 출신으로 인사기록카드에 취미는 독서, 특기는 합기도로 적혀 있다.

金權泰-李根安씨 對質

檢察 拷問 증거 상치 딱지 확인

8월 12. 27

판부어부 金成鶴씨 고문 추가

金權泰씨의 고문사건에 관하여 판부어부 金成鶴씨도 고문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판부어부 金成鶴씨는 8월 12일 판부어부 金成鶴씨를 고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부어부 金成鶴씨는 8월 12일 판부어부 金成鶴씨를 고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부어부 金成鶴씨는 8월 12일 판부어부 金成鶴씨를 고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李根安경감 拘

檢察 출국금지 요청

金權泰씨 고문사건에 관하여 판부어부 金成鶴씨도 고문당하였음이 확인되었다. 판부어부 金成鶴씨는 8월 12일 판부어부 金成鶴씨를 고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부어부 金成鶴씨는 8월 12일 판부어부 金成鶴씨를 고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판부어부 金成鶴씨는 8월 12일 판부어부 金成鶴씨를 고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8월 12일 판부어부 金成鶴씨를 고문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근안경감 출국 금지

1988.12.27
김근태씨 오늘 소환...대질신문 추진

검찰은 김근태씨를 고문한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50) 경감에 대한 수사와 관련, 김씨를 27일 오후 4시30분 소환,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이날 김씨의 고문피해 증거인 발뒤꿈치 상처 딱지를 압수한 전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송선홍씨를 소환했으며 이경감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현재 법원으로부터 김씨의 고문사건 및 재정신청사건 기록일체를 넘겨받아 법률검토를 마쳤으며 필요한 경우 김씨 이외의 고문피해자들도 소환, 이경감과 대질신문할 예정이다.

이근안 경감 구속키로

김근태씨등 피해자 조사...고문사실 확인 1988.12.28

전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고문사건 재수사에 나선 검찰 5공비리 특별수사부 5반(반장 이종찬 부장검사)은 27일 김씨와 부인 인재근씨, 간첩혐의로 기소됐다가 풀려난 김성학(38)씨 등 3명을 불러 이근안(50·경기도경 공안분실장) 경감의 고문사실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치안본부를 통해 이경감에게 이날 오후 5시에 출두토록 통보했으나 나오지 않자 소재 파악에 나섰다.

검찰은 이경감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김씨 등과 대질신문을 벌인 뒤 독직폭행 혐의로 구속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경감이 김씨에 대한

고문사실을 부인하더라도 법원에서 이미 김씨에 대한 고문사실을 인정했고, 김씨의 진술에 모순점이 없어 이경감을 구속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26일 오후 김씨의 고문 피해 증거인 발뒤꿈치 상처딱지를 압수했다고 김씨가 주장한 송선홍 당시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당시 의무과장, 상처딱지 압수 교도관을 소환, 조사한 결과 김씨의 주장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송씨는 압수 사실을 부인했으나 김씨를 검색한 교도관이 김씨로부터 화장지에 싸둔 문체의 상처딱지를 압수했다고 진술했으며 의무과장도 김씨가 입소 당시 "고

문을 당했다. 발뒤꿈치가 아프다"고 말해 고문당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간첩사건으로 연행돼 72일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이경감 등으로부터 고문을 받았으며 재정신청을 제기한 김성학씨의 고문사건에 대해 이 사건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돼 계류중이지만 김씨를 조사한 결과 이경감의 범죄 사실에 김근태씨 고문 이외에 김성학씨의 고문 사실도 추가할 것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경감의 범죄 사실을 두 김씨에 대한 고문만으로 한정, 구속한 뒤 김성학씨의 고문에 가담했다고 재정신청된 나머지 경

관들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경감, 26·27일 결론

[수원=배경특 기자] 27일 검찰 소환에 불응한 이근안 경감이 경기도경의 호출로 지난 24일 도경 대공과에 출두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이경감은 자신의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도경 대공과에 들러 자신의 직속상관인 이은부 대공과장과 면담을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 죄송할 뿐이다. 괴로워 며칠 쉬고 싶다"고 자신의 심경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후 이경감은 26일과 27일 계속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근안 경감 수배

전 민청련의장 김근태씨 등에 대한 고문사건을 수사중인 검찰 5공비리 특별수사부 박영수 검사 는 28일 김씨를 고문한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50·경감)씨가 이날 저녁까지 검찰에 출두하지 않음에 따라 이씨를 전국에 수배 했다. 1988.12.29

검찰은 치안본부와 경기도경에 이씨의 신병을 확보, 검찰에 출두시키도록 지시하는 한편 검찰 수사관들을 이씨의 집과 연고지에 보내는 등 소제과악에 나섰다. 한편 검찰은 이씨로부터 고문을 당한 남북어부 김성학(38)씨와 김근태씨 부부 이외에 김씨와 함께 구속됐던 문용식(27)씨와 김상철 변호사 등도 불러 조사를 벌였다.

이근안 경감 잠적

1988.12.29 3.08.1
검찰, 치안본부에 인도 요청

검찰은 김근태씨 등에 대한 고문과 관련 3일째 검찰에 출두하지 않는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50) 경감을 연행하기 위해 28일 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이 경감 집에 검찰수사관을 보냈으나 집에 아무도 없어 연행하지 못하고 29일 조종석 치안본부장에 이 경감의 신병인도를 강력히 요청했다.

치안본부는 "이 경감이 지난 26일부터 무단 이탈해 출근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경감의 신병이 확보되면 이 경감의 고문과 관련해 상급자가 고문사실을 은폐조작할 시간을 벌기 위해 이 경감을 빼돌렸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키로 했다.

李根安경감 잠적 11일째

30.8 金權泰씨 고문 경관 4명 내주 신병처리 예상
중앙 1989.1.05

재정인청의 의해 재판의 4명 내주 신병처리 예상
신병처리 예상
3.4일 후 신병인도
인 서울開浦洞 자택과 처
가들에 수사관을 보내 행
적을 추적했으나, 이씨를 찾
지 못했다.
검찰은 구랍 26일 이경
감을 출두시키지 않는 한편 전
국에 신병수배했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서울
英洙검사는 5일 京畿도경
5공비리 특별수사부 차
장에게 수배장교 대우를
장에게 수배장교 대우를
장에게 수배장교 대우를

재정인청의 의해 재판의 4명 내주 신병처리 예상
신병처리 예상
3.4일 후 신병인도
인 서울開浦洞 자택과 처
가들에 수사관을 보내 행
적을 추적했으나, 이씨를 찾
지 못했다.
검찰은 구랍 26일 이경
감을 출두시키지 않는 한편 전
국에 신병수배했다.

안기부·보안사의 고문도 수사하라

1988. 12. 28 국정조사권 발동하고 청문회 열도록

308.5

끔찍한 고문을 상습적으로 자행해 온 '고문 기술자' 이근안 경감에 대해 검찰이 마침내 수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검찰은 이근안씨에게 고문을 당한 김근태씨와 이씨가 간첩으로 조작한 남북어부 김성학씨도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발표를 들은 많은 국민들은 검찰이 제대로 고문의 진상을 밝혀달라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다. 피해자들의 고소나 고발이 없어 수사를 할 수 없었던 검찰이 뒤늦게 이런 발표를 한 것은 고문을 규탄하는 여론이 뜨거워지고 이근안씨에게 고문당했다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고소하겠다는 움직임 보였기 때문인 것 같다.

검찰이 이근안씨만을 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것은 아직도 고문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지 않음을 말해준다. 5공화국 시절 많은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법정에서 고문을 폭로한 것을 우리는 선명히 기억하고 있다. 안기부와 보안사, 치안본부나 시경의 대공분실을 거쳐 법정에서 수많은 양심수들이 고문으로 몸과 마음이 짓이겨진 채 고통스러워 하던 모습을 가족들이 얼마나 자주 보았던가? 이근안씨는 한 많은 고문 기술자들 가운데 얼굴이 알려진 한 사람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씨와 같은 '고문 기술자'가 있다는 사실은 고문이 치안본부 대공분실을 비롯한 수사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자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기관의 고위간부들까지 관련되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명백히 드러낸다. 남영동 대공분실에서는 비명소리가 그칠 날 없었고 밋자국이 뚜렷이 새겨져 있는데 그 책임자들이 고문 사실을 몰랐을까? 고문 기술자들은 누가 '육성'하여 그곳에 배치해 놓았는가? 고문당한 사람들의 폭로와 호소를 묵살하고 고문자들을 비호한 검사들과 법관들도 마땅히 수사를 받아야 한다. 그들은 고문자들에 못지 않게 피해자들에게 제2의 고문을 가한 것이다.

이 기회에 국회는 5공화국의 고문에 대한 국정조사권을 발동하고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온 국민 스스로가 그 끔찍한 고문자들을 신고하고 고발하는 전국적 고문추방운동에 나설 것을 제의한다. 모든 피해자는 한 사람도 빠짐 없이 고문당한 사실을 고발하고 고문자의 인적 사항을 신고하자. 고문의 '검은 손'이 버젓이 공직을 차지하고 있는 한 민주화는 공염불이 되고 말 것이다. 고문과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는 있지 않은가?

이근안경감 “안잡나” “못잡나”

208.5
 검찰·경찰 수사 14일째 소재파악도 못해
 “의도적 지연” 사건 축소 의혹

고문피해자들의 잇따른 폭로와 여론에 밀려 지난해 12월24일 ‘고문기술자’ 이근안(사진·경기도경 공안분실장) 경감에 대해 독자 수사를 하겠다고 선언한 검찰이 수사착수 13일이 지난 5일 현재까지도 이 경감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갖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는 이 경감이 상급자의 지시 또는 묵인 없이 소속부서가 아닌 외부에 고문도구를 싸들고 출장을 다닐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들어 그의 잠적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경찰의 의도 때문이라는 추측이 강하게 일고 있다. 또 경찰은 관련 경찰관의 소



환이 쉽지 않다는 것을 검찰에 보여 수사의 확대를 최소한으로 막으려 하고, 검찰은 검사들이 고문피해자들의 호소를 묵살한

바 있어 자칫 수사확대가 검찰에 까지 번질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수사를 늦추고 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경찰 실무자들이 검찰에 대해 적잖은 반감과 함께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과의 미묘한 관계가 걸려 있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관련 경찰관들이 사건축소를 위해 시간별기 작전을 벌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수사를 맡은 5공비리 특별수사부 박영수 검사는 “경찰에서도 상부감독자들은 빨리 소재를 파악해 자진출두를 유도하려 하나 중간간부 등 실무자들이 잘 움직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도경은 지난해 12월29일 치안본부의 지시에 따라 이근안 경감 검거 전담반을 구성하긴 했으나 적극적으로 활동하지 않고 있다.

허진원 경기도경국장은 5일 “이

경감으로부터 전화 연락이 오면 검찰에 자진출두시키겠다”며 “이 경감이 곧 심경변화를 일으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경감은 지난해 12월24일 자취를 감추기 전 수원지검 특수부 박태규 공안담당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자신의 구속여부, 검찰의 수사방향 등에 대해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 18-77에서 0미용실을 하며 막내 아들(14)과 함께 살고 있는 이 경감의 부인 신아무개(50)씨는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번 찾아왔다. 남편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일한 죄밖에 더 있느냐”면서 울먹였다.

신씨는 또 “남편은 몇달에 한번 집에 올 정도로 일에 열심이 있다”며 “일만 터졌다 하면 경찰만 희생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일을 지시한 국가안전기획부나 검찰은 책임이 없단 말이나”고 말했다.

分類: 703 2분
采誌:

日字: 1989. 1. 7

所載: 2 版

15

李根安경감 「五里霧中」 15일

檢察선 신병확보에 전수사력 동원지시 警察은 협조요청의면...의도적 회피인상

「상급자拷問지시」 李경감 "여론재판"

전민청년의장 金權泰씨를 전기고문하는것으로 지목된 李根安경감(51)에 대한 검찰수사발령 발표이후 15일이 지난 7일 현재까지 李씨의 신병확보는 물론 소재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있다.

검찰은 지난날 24일 李씨에 대한 수사개시를 공식적으로 밝혔뒤 10여차례에 걸쳐 치안본부와 京畿도청에 李씨 신병확보 협조요청을 하던한 판 대법정수부와 서울지검소속 수사관 20여명을 투입, 李

씨를 추적중이다. 그러나 검찰은 검찰의 협조요청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고있다. 뒤늦게 지난 5일 검찰이 발령수배를 해 李씨의 전이불시문이나 이 수배가 실효를 거두지 않는다는 기대는 하지 않고 있다.

정황의 이같은 소극적인 반응은 검찰의 고문수사 의도적 회피인상과 관련이 깊다. 검찰은 李씨에 대한 수사개시를 공식적으로 밝혔뒤 10여차례에 걸쳐 치안본부와 京畿도청에 李씨 신병확보 협조요청을 하던한 판 대법정수부와 서울지검소속 수사관 20여명을 투입, 李

그러나 일부에서는 金씨 고문사건 당시 京畿도청 공안부 실장이었던 李씨가 서울 龍山 구 남영동 대공포대에까지 출장을 나와 고문에 가담한 점 등으로 미루어 李씨 이상의 삼급자가 고문을 지시 또는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현직경찰고위직중 관련자가 많을 경우 차츰 많은 고문사건의 재판(再犯)이 될 것을 우려해 검찰의 의도로 李경감에 대한 소재 추적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근안경감 추적

서울지검 수사관 투입

전 민청년의장 김근태씨 등에 대한 고문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6일 고문경관 이근안 경감의 잠적으로 14일째 수사에 진전이 없자 이 경감을 검거하기 위해 서울지검 소속 수사관 10여명을 추가로 투입했다.

검찰은 대검 중수부 소속 수사관과 서울지검 소속 수사관 등 모두 20여명을 서울 개포동 용두동의 이씨 집과 충남 공주의 처가집 및 동료 경관의 집 주변 등에 보내 잠복 근무토록 하는 한편 다른 연고선에 대한 추적도 함께 벌이고 있다.

1989. 1. 07

이근안 경감은 최근 김기춘 검찰총장에게 편지를 보내 "내가 김성학씨를 수사한 적은 있으나 고문 없이 자백을 받아냈으며 김근태씨는 수사한 일도 없다"며 "전기고문 기술자라고 하는데 전기에 대해서는 상식도 갖고 있지 못하며 신변이 정리되는 대로 출두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고문사건 특별검사

김창국변호사 선임

1989. 1. 07

김근태씨 고문 경찰관 4명의 독직 폭행사건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12부(재판장 김종식 부장판사)는 6일 서울지방 변호사회가 추천한 2명의 변호사 중 김창국 변호사(48·고시 13회 광주지검 부장검사 역임)를 공소유지담당 지정변호사로 선임했다.

이근안씨 체포를 '특별지시'해야 1989. 1. 10

대통령은 '고문근절' 약속을 잊었는가? 308. f

'고문기술자' 이근안 경감의 행방이 오리무중이다. 경찰은 처음에 그가 '출장중'이라고 말했다. 정말 어디론가 출장이라도 보냈다는 말인가? 검찰은 20여명의 수사관을 동원하여 그의 연고지와 갈 만한 곳을 수사하고 있다고 한다. 전국에 얼굴과 신원이 이렇게 잘 알려진 피의자를 이리도 오래 '못잡는' 치안당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공권력인가? 어디로 달아났는지 '보호'를 받고 있는지 분명하지 않은 이근안씨는 "자신은 고문한 사실이 없으며 신변을 정리한 뒤 출두하겠다"는 통고문을 검찰총장에게 보냈다고 한다. 도대체 이것은 용기인가 배짱인가? "고문한 사실조차 없다"는 사람이 신변을 정리할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제 경찰이나 검찰에 대해서 고의적 수사기피나 직무태만이라고 비난하고 싶지도 않다. 경찰이나 검찰이 스스로 고문자를 찾아내어 엄벌한 사례가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이나 검찰을 향해 성실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은 부질 없는 것이다.

이제야말로 행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노 대통령 자신이 정권의 운명을 걸고 나서야 할 때이다. 노 대통령은 고문을 뿌리뽑겠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던 '취임사'를 벌써 잊었는가? 최근 정부와 여당이 '수호하겠다'고 다짐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고문을 허용하는 제도란 말인가?

노 대통령은 "이근안씨를 빨리 체포하라"고 특별지시를 하거나 "다시는 이런 고문경찰관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담화문이라도 발표해야 한다.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가 "이근안 경감을 꼭 잡겠다"고 약속한다면 국민들은 그의 말을 환영할 것이다.

아무리 민주주의의 구호가 요란하게 들리더라도 우리사회의 어느 한 구석에서 고문받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새어 나온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종말이다. 여론에 밀려 이근안씨를 붙잡아 구속하고 적당한 처벌을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피해자들이 온갖 어려움을 겪은 끝에 간신히 확인한 이 흉악한 고문기술자와 함께 배후의 인물들을 밝히고 응징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만이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길이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방법이다. 이것은 또 그의 권력기반이 더러운 고문자들에 있지 않고 깨끗한 도덕성 위에 있음을 입증하는 길이다.

특별검사, 김근태씨 조사

1989. 1. 10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공소유지 담당 지정변호사인 김창국 변호사는 17일 법원으로부터 넘겨 받은 사건 관련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18일 오후 피해자 김씨를 서울형사지법 6층의 신문실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308. 5



김근태씨 고문 공소유지 담당 지정변호사 김창국씨

"전국민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게 돼 큰 책임감을 느끼며 공정한 수사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6일 서울 형사지법에 의해 김근태씨를 고문한 경관 4명에 대한 독직폭행사건의 공소유

지 담당 지정변호사로 지명된 김창국(48) 변호사는 수사에 앞선 소감을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사건은 부천시 성고문사건과는 달리 시국사건과 관련한 고문의 본산처럼 여겨지던 '최안본부 남영동 대공본실'에서 이뤄진 대다 몰고문·전기 고문 등 전형적인 고문수법이 동원된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어 치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검찰기록 참고 피해자 진술우선 이근안 기소되면 병합심리 가능

1989. 1. 10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수사에 임하는 소감은.
-개인적으로 한사람의 변호사가 더 있었으면 하지만 일단 말은 이상 열심히 해보겠다.
-어떤 이유로 선임되었다고 생각하나.
-15년 이상 검찰에 몸담아왔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사건을 부천시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장소와 수법이 다르다는 점 이외에도 부천시 사건은 검찰이 적극적인 자세로 수사해 혐의가 많이 밝혀진 상태였으나 이 사건은 애초부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전제로 수사해 거의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수앞으로의 수사계획은.
=기록을 보아야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으나 우선 피해자 김근태씨의 이야기

를 들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다. 서울 형사지법 6층 신문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게 되며 수사도중 필요에 따라 지정변호사를 한명 더 요청할 예정인데 재판부도 이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고문경관 4명의 구속여부는.
=헌법법상 재판부에 구속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아직 기록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할수 없다.

-이근안 경감의 관련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재정 결정을 통해 기소된 4명의 공소유지만을 맡기 때문에 이씨의 수사는 나와 무관하다. 그러나 검찰이 이씨를 기소할 경우 공범으로 인정되면 병합심리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고문에 대한 생각은.
=시국사범에 대한 고문뿐 아니라 일반형사범에 대한 고문도 커다란 문제이고 교도소 안의 폭력문제에도 큰 관심이 필요한 상태이다.

-기억에 남는 시국사건 변론 경험은.

=서울대생 국가보안법 위반사건 등 3~4건 정도의 학생사건을 맡은 적이 있다.

김 변호사는 전남 강진에서 태어나 61년 고시13회에 합격,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대구·부산·서울지검 검사, 전주·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역임한 뒤 81년 변호사를 개업해 현재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도 가입돼 있다.

拷問추방계기 되도록 최선

金權泰씨 고문사건 특별검사 金昌國 변호사

「金權泰씨 고문사건은 5개월을 벌여놓았다.」

시절 「고문」의 본 「정면」 여 「金昌國」은 南營洞 池安 1부 대 의 대한 신변보장위원회 대 하여

공부실에서 저질러진 수사기 관의 대표적인 고문행위이다

로 재판과정에 그 진상을 밝히기 위해 우리사회에서

고문행위 추방을 위해 계 기가 된다면 최선책을 다 하

겠음이다」

金權泰씨 고문사건의 공소 유 지 특별검사로 지정된 金

昌國 변호사(48)는 10일 기자 들과 첫 만남, 사건을 맡게 된

소감과 앞으로의 수사 방향을

재판부에 이를 구속하도록

적극 요청할 생각이라고 말

했다. 金昌國 변호사는 수사 계획에 대

해서 「일단 기록검토를 하되

그에 대한 구속 여부를 담

재판부가 직권으로 판단할

무제라고 말했다. 金昌國 변호사는 「그나 그나

수사 200을 통해 고문의 가담

한 경찰관들이 누구 또는 중

대한 신문과 평판할 경우 현

장관들을 신시할 것이라고

고 말하기도 했다. 金昌國 변호사는 또 전기 고문기

술자로 지목돼 현재 치명수

했다. 金昌國 변호사는 이 사건은 富

수자로 지목돼 현재 치명수

했다. 金昌國 변호사는 이 사건은 富

수자로 지목돼 현재 치명수

했다. 金昌國 변호사는 이 사건은 富

수자로 지목돼 현재 치명수

관련경찰들 필요할때 現場검증



金權泰씨 고문사건을 날
날이 밝혀내겠다고 말
하는 특별검사 金昌國 변
호사.

배종인 李根安 檢察官의 전기와
구속될 경우 다른 고문경찰
관들과 함께 병행수사를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金昌國 변호사는 金南康 檢察官이
로 서울대법원 재판장 중 고등고
시에 합격해 지난 66년 全州
지정변호사로 출발 全州지정
부장사 光州지정부장검사
를 거쳐 81년 변호사를 개업
했다. <崔英勳 기자>

김근태씨 고문 수사 착수 공소유지 지정 변호사

김근태씨 고문사건의 공소유 지 담당 지정변호사로 선임된 김. 창국 변호사는 10일 서울 형사지 법으로부터 이 사건 관련기록을 넘겨 받아 곧바로 수사에 착수키 로 했다. 김 변호사는 서울 형사지법 6 층 신문실을 사무실로 사용하며

앞으로 기록 검토 및 피고인 소 환조사 등 공소유지를 위한 수사 를 벌이게 된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처음 이 사건수사를 할 때 무혐의를 전제 로 한 때문인지 거의 조사가 돼 있지 않고 피고인도 많아 재판부 에 지정변호사를 한명 더 선임해 주도록 요청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구속요청 여부는 기록을 모 두 검토한 뒤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1989. 1. 11

고문기술자 왜 못잡나 308.5

지난 연말에 경악스러운 고문현장을 고발하는 사진전람회가 서울에서 열린 일이 있다. 고문의 인간성과 고통을 보고 경험한 우리들이므로 그것을 폭로하는 최초의 사진전이라니 주목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전시된 사진작품들은 실제상황이 아니라 작업장에서 연출한 장면을 찍은 것이었다. 하지만 작가는 카메라의 눈을 통해 생생하게 포착한 장면들이 진실임을 은폐하려는 자들의 음험한 기도에 대해 단단한 메시지를 전한다고 말했다. 관람자들은 전기고문을 비롯하여 물고문, 스탈린고문, 제트기고문, 폭격기고문, 허벅지 고문, 바늘고문, 통닭구이 고문등을 바라보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다 같이 파괴되는 것에 전율해마지않았다.

경기도경공안본실 李根安경감이 도망한지 한달이 되었지만 체포되지않고있다.

그는 앞의 고문사진전에서도 고발당했듯이 인간성을 파괴하는 [전기고문기술자] 로 지목되어있다. 당초 시국공안 사건적방자들의해 [심명불상의 전기고문기술자] 로 떠올랐던 李根安경감이다.

검찰은 석방자들이 전기고문기술자를 집단고소하려하자 독자수사를 선언한뒤에, 李경감에대한 증거는 확보했다.

피해당사자인 金權泰씨와 부인 印在嬢씨, 金씨가 수감되었던 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및 의무과장, 법원에 [李경감의 고문에 못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했다]고 재정신청을 낸 남북어부 金成鶴씨등의 진술을 통해 고문의 증거를 찾아냈다.

이제는 李根安경감이 인간성을 파멸시킨 전기고문기술자라는 사실을 감할수없게 되었다.

검찰은 李根安경감에대한 지명수배령을 내려놓았으므로 그가 연행되면 즉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공무원의 독직·폭행등 가혹행위) 혐의로 구속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李根安경감이 잡히지 않는데 있다. 신병확보가 지연되자 안잡는지 못잡는지 알수없다는 의혹이 일더니, 이제는 검찰이 [방조] 한다는 의혹까지 생겼다. 초기단계부터 수사는 미적지근했다. 한 검찰관계자는 피의자 李根安경감이 대공분야에 공이 많은 현역경찰관이라 경찰내부의 반발이 심해 그의 신병인도를 두고 진통이크다고 했다. 따라서 검찰이 강제구인하는것보다 경찰이 자체적으로 신병을 인도하는것이 모양이 좋아 후자를 택하기로 했노라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경찰은 처음에 죄장이탈자로 李경감의 수배를 지시했을 뿐이고, 1월 들어서엔 연고지수사지시 아니면 철저히 시, 검거추가지시따위 내부수배지시만을 내렸을뿐이라고 보도된다.

가혹한 인권유린의 혐의자를 두고 현상수배, 특진수배는 커녕 그흔한 지명수배조차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그런 내용대로라면 경찰과 검찰은 [방조] 의혹에서 벗어날 방법이없다.

남은것은 하루속히 전기고문기술자로 지목된 李根安경감을 검거하여 은폐하려는 고문의 실상을 밝히는 일이다.

[인권탄압은 침묵을먹고 자란다] 는 말은 프랑스대통령이 인권선언기념일에 한것으로 우리들도 인상깊게 기억하고 있다.

인권유린의 수단인 고문행위가 침묵을 먹고 살거나 어둠속에 잠적하도록 용납될수는 없는 일이다.

한국 1989. 1. 26

이근안경감 일본 밀항 기도

李根安경감 釜山 잠입說

경찰, 전담반 편성 추적搜查

釜山=趙廣熙기자 釜山시 경인 25일 前民青聯의장 金權泰씨 전기고문수배된 李根安경감(51)이 釜山지방에 잠입했을 가설이 있다는 치안본부의 진술을 받고 있다. 전담반을 편성, 추적수사에 나섰다.

釜山시경인 이예파라 李경감의 조카(31·슈퍼마켓점장) 釜山市民樂洞, 시촌의 동생(44·부직) 釜山市牛項2洞(조카딸) 32·조산원(동) 30명의 釜山에 살

고 있는 것을 확인, 이를 주범에 대한 탈주사과와, 버스타미팅에 형사대를 긴급배치한다. 한편 각 속박업소·사찰을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하고 있다.

李경감의 조카는 경찰의 서 산출인 李경감이 지난 해 8월 5일부터 釜山에 은둔이 있으나, 이후에는 전혀 소식이 없었다.

89. 1. 26

치안본부 수사지시
 1989. 1. 27 중앙
 수배 李根安경감
 온천지역 잠입說

수배 李根安경감 온천지역 잠입說

치안본부 수사지시

제국의 공안을 통해 『李根安』가 평소 피부병을 앓아 온천에 자주 갔었고 지난 12월 26일자로 경기도경에 우송한 사직서 봉투에 대우 우체국 소인이 찍혀있는 것으로 보아 온천지역에 은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같이 지시했다.

잠적 이근안경감 지난달 사직서 우송 대전 우체국 소인 찍혀

1989. 1. 28 2000
 치안본부, 온천일대 추적

치안본부는 26일 전 민청련 의장 김근태씨 전기고문사건과 관련 지명수배중인 전 경기도경 공안분실장 이근안(51) 경감을 하루빨리 검거하라고 전국 각 경찰에 지시했다.

치안본부는 이날 '직장 무단이탈 수배자 색출검거 철저'라는 공문을 통해 "이 경감이 평소 피부병을 앓아 온천에 자주 다녔고 지난해 12월 26일자로 경기도경에 우송한 사직서 봉투에 대전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

아 대전 부근 온천지에 은거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히고 이같이 지시했다.

이근안씨를 숨긴 자는 누구인가?

고문 뿌리뽑을 전면수사 시작하라 1989. 1. 31

이근안 경감은 하늘로 치솟았는가 땅속으로 숨었는가? 전국의 방송과 신문이 큼직하게 보도한 그 얼굴을 가지고 어느 집, 어느 여관방에 숨어 지낼 수 있던 말인가? 10만여명을 거느린 경찰과 평소에 수사력을 자랑하던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른바 '시국사범'에게는 거액의 현상금을 걸던 경찰이 이근안씨 체포에는 왜 이렇게 무성의한가? 그리고 치안본부는 이근안씨가 지나간 곳과 은신한 곳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을 엄중히 문책하겠다는 경고를 왜 하지 않는가?

최근 치안본부는 이근안씨가 검찰총장 앞으로 보낸 편지 발신지가 대전이며 그가 평소에 피부병을 앓아 온천을 자주 다녔다는 점을 상기하고 유성을 비롯한 온천 주변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한다. 이씨를 잡으라고 국민들과 언론이 입을 모아 요구한 것이 언제부터였는데 이제 겨우 이 정도의 '추리'를 해냈다는 말인가?

이근안씨가 '고문기술자'로 확인된 뒤 경찰과 검찰 그리고 정부가 보인 태도는 그들이 이씨를 고의적으로 숨겨두고 있거나 잡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단정하게 만든다.

더구나 수사기관들과 정부는 이 문제의 핵심

을 흐리고 있다. 이근안씨를 잡는 일만으로는 고문을 둘러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수많은 시국사건과 간첩혐의 수사에서 일어난 고문과 조작에서 이씨는 하수인에 불과할 뿐이다. 그와 같은 사람을 길러내고 배치하고 지휘했던 경찰 고위간부들의 죄상, 불법적인 경찰조직의 운영실태가 함께 드러나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감이 잡히지 않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검찰과 경찰은 그의 위 아래 인물들과 조직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 경감과 그 일당으로부터 참혹한 고문을 당한 김근태씨와 '반제동맹당 사건' 관련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피해자로부터도 진술을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국사건 관련자들의 증언이 거짓으로 드러난 경우가 언제 있었단가?

당국은 이근안씨와 그 직속 상관들에 대해 출국 금지조치를 내리는 동시에, 그들을 직위 해제하고 본격적 수사를 해야 한다. 이근안씨는 물론이고 그의 배후에서 '고문기술자들'을 조종한 악독한 경찰간부들을 경찰조직에서 도려내지 않는다면 경찰은 공권력을 맡거나 행사할 자격이 없다.

李根安경감 일본 밀항 소문

1989. 2. 3. 8. 5

40대전화 "千2百萬원받고 알선" 提報

오늘麗水출항예정...전국항만 검색강화



李根安 경감

전기고문 기술자 李根安경감이 일본 밀항을 기도한다는 정보가 포착돼 이근안경감은 전경들에게 전국 항만검색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의 파견된 지니는 25일 밀항을 시도하고 밝힌 40대 남자가 전화를 걸어와 李根安

경감으로 보이는 50대 남자가 일본으로 밀항을 부탁해 1천2백만원의 밀항선을 알선해 준다고 발표했다. 이 남자는 이근안 경감을 소개하고 밝힌 자가 경감 X 리 4000호 검은색 로얄 승용차를 타고 와 밀항부탁을 받고 2일 새벽 1시 이원성 순천지청장 등과 수사관 10여명이 나서 여수항을 출항하는 선박을 알선해 준다고 경찰의 제보했다.

경감이라고 밝힌 자가 경감 X 리 4000호 검은색 로얄 승용차를 타고 와 밀항부탁을 받고 2일 새벽 1시 이원성 순천지청장 등과 수사관 10여명이 나서 여수항을 출항하는 선박을 알선해 준다고 경찰의 제보했다. 이 남자는 이근안 경감을 소개하고 밝힌 자가 경감 X 리 4000호 검은색 로얄 승용차를 타고 와 밀항부탁을 받고 2일 새벽 1시 이원성 순천지청장 등과 수사관 10여명이 나서 여수항을 출항하는 선박을 알선해 준다고 경찰의 제보했다.

경감이라고 밝힌 자가 경감 X 리 4000호 검은색 로얄 승용차를 타고 와 밀항부탁을 받고 2일 새벽 1시 이원성 순천지청장 등과 수사관 10여명이 나서 여수항을 출항하는 선박을 알선해 준다고 경찰의 제보했다.

"이근안경감 일본 밀항 기도

1989. 2. 3. 8. 5 40대 남자 제보 1천여만원 받고 알선해줬다"

검찰, 여수항 수색 허탕...자작극일수도
 검찰은 2일 전기고문 기술자 이근안 경감이 밀항을 기도한다는 정보에 따라 전남 여수항을 비롯 전국 항만에 대해 경계를 강화하도록 경찰에 긴급지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밀항 알선자라고 밝힌 40대 남자가 지난달 25일 검찰에 전화를 걸어와 "스스로 이 경감이라고 칭한 50대 남자가 일본 밀항을 부탁해 1천2백만원을 받고 밀항선을 알선해줬다"고 제보, 그동안 자체 조사를

해 이날 전국 항만경계를 강화하도록 경찰에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경기X 리4000호 로얄 승용차에 대한 차적조회 결과 비슷한 승용차가 7대로, 5대는 차주인을 찾아내 별다른 관련 혐의를 찾지 못했으나 나머지 2대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다. 검찰은 제보내용 중 밀항기도자가 스스로 이 경감으로 밝힌 부분이 상식에 어긋난다고 보고 수사 혼란을 야기시키기 위한 이 경감의 자작극이거나 장난전화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